

‘전입에서 정착으로’...무안군 인구 10만 시대 연다

청년이 성장하고 머무는 도시 ‘무안’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우려 속에서도 무안군은 성장도시로 전환하며 ‘인구 10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남악·오룡 신도시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이 확장되고, 출산과 돌봄, 일자리와 교육을 아우르는 정책 전환을 통해 ‘전입’이 아닌 ‘정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구 증가가 아니라 군민 삶의 조건을 바꾸는 과정이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변화 속에서 수립된 인구 정책 5개년 계획은 무안의 시 승격을 좌·우할 분 기점이다. 본지는 인구 10만을 넘어 도시 체계 전환을 준비하는 무안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본다.

남악·오룡 신도시 성장축...도시 체질 전환 청년 성장·귀농귀촌·외국인 정착까지 연결 산업·주거·교육·돌봄 아우른 정착전략 강화 ‘무안시 승격’ 목표 5개년 인구정책 본격 가동

△성장도시 무안 ‘인구 10만 시대’ 준비 무안군이 인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악·오룡 신도시의 성장과 농촌 마을의 재생이 함께 진행되며 도시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무안 인구는 9만5592명(4만6419세대)으로, 전년 보다 2905명(3.14%) 증가했다. 특히 남악·오룡지구 인구는 5만1867명(2만986세대)으로 군 전체의 절반을 넘어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령 구조에서도 특징이 있다. 18세 미만 1만 6295명(17.1%) 중 유소년(14세 이하)이 1만3038명(13.6%)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은 2만443명(21.4%)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동시에 젊은 인구 기반은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안군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증가율 8위,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군 가운데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기준으로도 인구증가율 15위로 성장 가능성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단순 인구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정착에 행정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무안군은 출산·양육 지원은 물론, 일자리·주거·돌봄·교육·문화·교통 등을 아우르는 생애주기 맞춤형정책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출생 이후 18세까지 약 1억2000만원 규모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양육 부담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책 방향도 ‘전입’ 중심에서 ‘정주’ 여건 강화로 전환하고 있다. 한마디로 도시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인데, 아이를 키우는 가족, 도전하는 청년, 농촌에서 삶을 이어가는 귀농·귀촌인,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외국인 주민까지 모두 포용하는 도시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속가능한 도시 무안...성장 넘어 정주기반 강화 지난해 인구·주거 정책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성장 기반을 한층 다지는데 방점을 찍었다. 출생기반수당의 경우 신청자 566명에게 수당 지급을 마치면서 현장 안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168가구) 등 주거비 지원도 실제 체감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전입 인센티브는 일반전입자 6530명(국군장병 23명, 대학생 319명 포함)에게 지급했고, ‘무안 1

+1 솔로돌로 프로젝트’(20명 참여) 등 관계 형성 프로그램도 시도되며 인구 유입 정책의 폭을 넓혔다. 청년 분야 역시 변화가 뚜렷하다. 리모델링한 청년문화복지 공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은 5개 사업(36명), 청년 취·창업 4개 사업(158명)을 지원했다.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3개 사업 601건)과 문화복지 카드(4927명 선정) 등 생활 지원도 병행하며 청년 정착 기반을 다졌다.

인구유입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산업과 인프라다. RE100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RE100 특별법 제정·국가산단 지정’에 행정 역량을 모으고 있다. 100만평 규모의 K-푸드 융복합산업단지(7600억원)와 액터기업 유치로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산업AX 혁신 콤플렉스’(1150억원) 조성을 통해 스마트 산자유원센터 고도화, 첨단농업복합단지, 로컬푸드 직매장, 인대형 스마트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주 인프라의 경우 신도시 출·퇴근 교통혼잡 해소 위한 축산C 시설(130억원), 오룡복합문화센터 착공(255억원), 전남 서부권 청년비전센터 건립(200억원) 등 ‘살기 좋은 도시’ 기반이 확충될 예정이다. 무안공공도서관 신축(영어도서관 포함)과 함께 무안사랑유치원·무안사랑초등학교·무안희망중학교 개교, 오는 9월 무안희망초등학교 개교 등 교육 인프라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출산부터 정착까지 생애주기 지원 출산부터 정착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가족 중심의 정주 기반을 확충한다. 올해 무안군 인구정책은 ‘출생·양육 부담 완화’에서 ‘가족의 생활 기반 강화’까지 범위를 넓힌다. 대표 사업은 출생기반소득이다. 1~18세 아동에게 월 20만원(현금 10만원,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은 2024년생 583명, 2025년생 580여 명으로 사업비 22억원을 편성했다.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돌봄·교육·주거 정책과 결합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는 정주의 핵심 조건으로 판단된 무안군은 올해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이어간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월 최대 25만원까지 ‘보금자리 지원사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거부담을 낮추



무안군 찾아가는 청년지원센터 운영.

겠다는 계획이다. 총 2687가구에 사업비 6억9000여 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육 과정에서 돌봄 공백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으로 양육 부담을 낮추고, 성장기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입학축하금, 교복비·졸업앨범비 지원 등 교육 정착까지 연계해 ‘생애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청년 정착기반 확충

청년정책을 ‘지원’에서 ‘성장’과 ‘연계’ 중심으로 전환하며 청년 정착 기반 확충에 나선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의 확대다. 학업·취업·창업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한 청년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도록 상담·생활관리·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취·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창업 기반도 강화된다. 무안복합문화센터 내에 ‘청년상가 8개소’를 운영해 임대료 부담을 낮춰 초기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창업자 15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발을 돕는다.

지역산업과 기술·문화·콘텐츠 아이디어를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일반랩과 전문랩’을 조성·운영해 시제품 제작과 초도생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 지원체계는 무안군·지역대학·창업지원기관·민간기업과 연계해 운영 중이다. 무안군 청년플랫폼은 정책 거점으로서 정책 정보 제공을 넘어 네트워크데이·청년주간행사·성과공유회 등 ‘만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1인 가구 청년 지원(공구 대여, 밀키트 만들기), 고립·은둔 청년 예방 프로그램(온기 우편함 운영), 독서·글쓰기 등 자기성장 프로그램도 확대해 ‘생활권 청년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무안군은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여 머물게 하지 않고, 정책 제안과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실제 ‘공동설계자’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년 일

지리를 넘어 성장의 경로를 연결하는 구조적 전환, 청년 자립 기반 강화가 무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 떠오르고 있다.

△전입에서 정착까지...머무는 무안모델 강화

무안군이 ‘전입’ 중심의 인구 유입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착’으로 이어지는 ‘머무는 정책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단기 방문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경험한 뒤 머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무안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상담은 227건에 달했고, 전국 단위 박람회에도 4회 참여했는데 여기서 242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성과로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으며 정책 경쟁력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관심을 바탕으로, 상담을 실제 전입·정착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사후관리와 정책 연계 체계로 확장해 ‘상담 이후가 강한 귀농·귀촌’ 모델을 만들어 낼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체류형 귀농인의 집 입주자 교육을 6세대 대상 34회(68시간)를 진행하고, 숙소 등 방수공사·온수배설 설치 등 환경 정비까지 병행해 실제 ‘살아보기 이후 정착’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체류형 귀농인의 집은 8세대가 최대 10개월 머물며 영농교육(연 100시간)과 생활 적응을 병행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전입에서 살아보기(8세대 지원), 어울림마을 조성,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연계해 ‘주거·일·관계·교육·사후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착 패키지를 구축하고 있다. 새뜰하우스(문단별, 2동 기반)도 ‘살아보기 이후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정착형 주거 모델로 기능하도록 지속 추진한다.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강화

외국인 주민을 단순 노동력이 아닌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정착’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올해 외국인 정책의 핵심은 생활 적응, 권익 보호, 지역사회 참여 확대다. 군은 군정 모니터링단(20명)을 운영해 생활 속 불편·차별·제도 등 개선

과제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2000만원),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2900만원) 등을 통해 소통 기반을 확대한다. 특히 유학생 및 외국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탐방, 기업답사 등을 연계해 ‘배우고, 일하고, 정주하는’ 경로를 지역 안에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무안군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무안군은 중장기 인구정책의 방향을 담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군은 ‘제2차 무안군 인구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단편적 사업 추진을 넘어 그동안의 정책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중심의 실행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인구구조, 자연·사회이동, 생활인구,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제1차 계획과 기존 정책·예산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그래서 주거·일자리·교육·돌봄·정주환경 등 삶의 요소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전략과제와 실행사업을 구체화한다. 또 연차별 시행계획, 재원조달·투자우선순위, 성과지표(KPI) 및 모니터링 체계, 민·관 거버넌스 구축방안까지 포함한 실행형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인구정책은 출생·양육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성장하고 머무는 일자리·문화, 안정적인 주거, 교육·돌봄, 교통과 정주환경, 전입을 돕는 생활행정까지 삶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연결이 작동할 때 ‘사람이 머무는 무안’이 현실이 된다는 김 군수는 “인구정책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종합전략이다. 청년과 귀농·귀촌인이 정착하며 외국인 주민이 이웃이 된다”며 “군민의 삶이 변화하는 체감형 정책으로 ‘인구 10만 무안 시대’에 힘입어, 군민 숙원인 무안시 승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3@gwangnam.co.kr



김산 무안군수가 청춘만남 프로젝트 ‘솔로돌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무안군 청년 정책 제안대회.